

공공기관 안전관리 1등급 '0곳'... 에너지공단 등 4곳은 '미흡'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곳 '양호' 평가대상 90곳 중 58곳은 '보통'

새만금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4곳이 '공공기관 안전관리'에서 4등급(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국립공원공단·한국환경공단 등 3등급(보통)에 그친 공공기관 수가 평가대상 90곳의 64%인 58곳에 달했다. 1등급(우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으로 구분된다.

작년 기준 심사결과, 1등급(우수)은 없었고 2등급(양호)이 28곳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

3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 내 기재부. /메트로

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한의학연구원 등도 3등급에 머물렀다.

이어 '미흡' 수준인 4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었다. 5등급(매우 미흡)은 1등급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올해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또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2022년과 비교하면, 1등급(우수)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보통 이상(2, 3등급) 기관은 3곳 늘었고, 미흡 이하(4, 5등급) 기관은 3곳 줄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이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며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경영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함께 의결한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에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이는 국내에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총 311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에는 근로복지공단, LH, 중부발전, 한국부동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개가 포함됐다. 전년에 비해 5곳 증가했다.

특히 올해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으나,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공공기관이 공시 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전국 자투리 농지' 공원 등으로 탈바꿈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산업단지·도로·택지 등으로 개발된 뒤 남은 자투리 농지가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이 같은 자투리 농지는 전국 2만 1000헥타르(ha)로 추산되는데,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3950ha)의 5배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활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과소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도로와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ha 이하)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오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6일 전북 진안 성수면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해 계획적으로 개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송 장관이 자투리 농지에 설치한 스포츠공원(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종이컵·물티슈 요청하면 드릴게요"

환경부, BBQ 등 16곳과 협약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감축"

푸라닭·김가네 등 프랜차이즈 16곳이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음식점 만들기 등에 동참한다. 고객이 종이컵, 물티슈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먼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16개 음식점 가맹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울 여의도 컨심턴호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곳은 고돼지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등이다. 또 자담

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 등이 합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16개 음식점 가맹점 사업자대표 및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의 실천문화 확산을 약속했다.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된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유통

농식품부, 41개 신규 개선과제 발표 숙성치즈 소분 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청과류와 양곡류, 축산물 등만 거래가 가능했다. 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고, 숙성치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개선과제 41개를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규제개선방안은 올해와 내년 초에 걸쳐 순차적 시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과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 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 유통비용절감, 여가 수취가격상승 등을 기대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의 일부도 완화한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내리는 조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한다. 이는 10월 시행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꾀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의 경우,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늘려(6월 시행 예정) 동물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폐지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송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사료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